

# 남북 정상 “올해 종전 선언...핵 없는 한반도 실현할 것”

“군사적 긴장 해소에 따라 단계적 군축...평화협정으로 전환”  
 “평화체제 구축 위한 남·북·미 3자, 남·북·미·중 4자회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이산가족·친척 상봉 진행”  
 “DMZ 평화지역으로 조성...NLL 평화수역으로 조성 합의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내 종전을 선언하고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로 합의했다.

남북 정상은 기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향후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남북 정상은 27일 오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4·27 판문점 선언)에 합의, 이를 발표했다.

남북 정상은 선언에 앞서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라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000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며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을러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했다”며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남북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측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이 의의 있고 중대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자기 책임과 역할을 다 하는데 합의했으며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남북 정상은 향후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해 한반도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올 가을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다.

남북 정상은 평화협정 전환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무장지대(DMZ)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드는 한편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했다.

남북 정상은 “5월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이와함께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나가기로 했다”며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군사적 문제 협의를 위해서는 항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27일 경기도 파주 판문점 평화의집 앞에서 판문점 선언을 발표 한 뒤 박수 치고 있다.

후 국방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다음 달에는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민간교류와 협력 방안도 향후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남북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 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향후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에 설치하기로 했

다.

경제협력을 위해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어 “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북 정상은 남북 적십자회담 개최와 이산가족·친척상봉 등 문제

에 대한 협의 해결 원칙도 천명했다.

이산가족·친척 상봉에 대해서는 “오는 8월15일을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남북 공동 의의가 있는 날을 중심으로 양국 공동행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 文대통령, 한·일·중 정상회의서 ‘판문점선언’ 드라이브



오는 9일 일본에서 열리는 제7차 한·일·중 정상회의는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제 사회 협조를 당부하는 첫 다자외교다.

이달말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정상회담의 중간평가 자리가 될 수도 있어 그 결과에 기대를 더욱 모으고 있다.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까지 구상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

전지론에 한층 더 힘을 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와 만나 판문점 선언에 대한 협력과 지지를 구한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일본과 중국이 소외된다는 ‘배심론’을 불식시키는 시간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 지지를 동력삼아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미 정상회담 성공 개최까지 연계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27일 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판문점 선언

국적인 명문화된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구심이 여전한 것이 현실이다. 남북 합의 상황이 실제로 잘 이행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남북정상회담 성과와 판문

###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판문점 선언 지지와 협력 당부 전망 3국 관계 뼈격 2년반만에 열려...실질 협력 방안 중점 논의

에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 적극 노력 ▲완전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올해 종전 선언 및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 적극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점선언을 국제 사회에 충분히 알리면서,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지지를 다질 필요가 있다. 오는 9일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그 무대가 될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문 대통령이 해외 정상들과 직접 만나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는 것은 이번 정상회의

가 처음이다. 판문점 선언의 성과를 한반도 내부에 그치지 않고 외부에 공표하는 시간이다.

한편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는 그동안 뼈격거리던 3국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보인다.

한·일·중 정상회담은 동아시아 발전과 평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시작했다. 3개국 이 번 갈아가면서 매년 개최해왔지만 지난 2015년 11월 서울을 마지막으로 열리지 못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과거사 문제로 중국과 일본은 조어도(釣魚島·일본명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은 사드 갈등으로 진통을 겪어 왔다.

한·일·중 정상회담은 연례 개최 원칙에 따라 2016년 의장국인 일본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시 중국이 참여를 꺼렸고, 우리나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와 조 기 대선 이슈로 3국 회담은 결국 무

산됐다.

이후 일본은 지난해 10월 등 여러 차례 한·일·중 정상회담의 개최 시기를 조율해 왔다. 오는 9일 가까스로 회담이 열리게 되면서 문 대통령과 리 총리는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하게 됐다.

2년 반만에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담에서 3국은 정치뿐만 아니라 실질 협력 발전 방안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3국간 협력이 제도화되고 에너지, 환경, 인적교류 등 다양한 실질 협력 분야에서 세 나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도출될 것”이라며 “이로써 궁극적으로 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 기반이 확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중 정상회의를 마친 후 아베 총리와 양자회담·오찬 협의를 이어서 갖는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 가짜뉴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